



기획특집

외국인 고용허가제 그후 1년 성과와 문제점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1년 후에 어떠한 현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대책을 생각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 공급이 더디고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불법체류자”를 대체 인력으로 써야 할 판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었던 기사를 되새겨보는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허가제 및 농업 연수생 제도를 게재하고자 한다.

[그 후 1년] 인권 보호는 '합격' 인력 공급은 '낙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노동연구원 평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 도입에 시간이 많이 걸려 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들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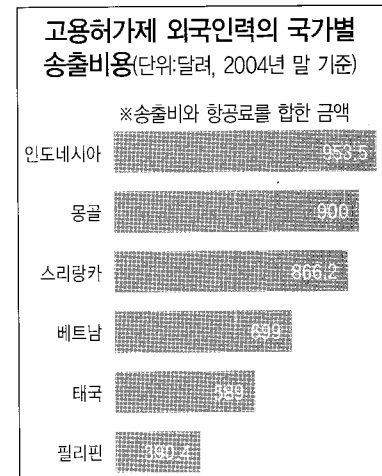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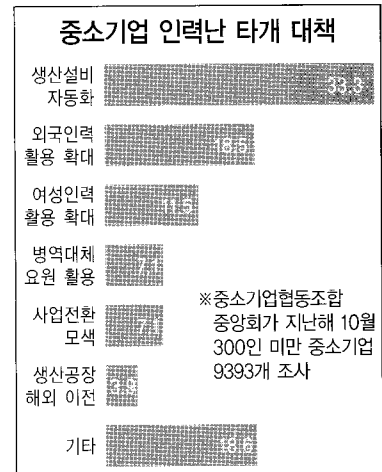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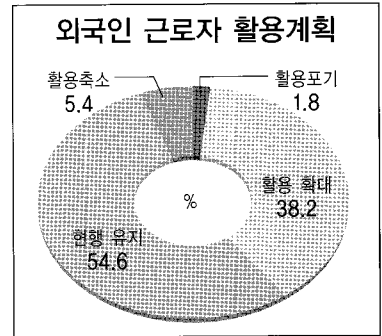
◆ 도입 속도 너무 늦어 =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만483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 도입 숫자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었지만 지난해 3만3500명, 올해 3만9000명을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다리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으로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경기 반월공단 P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신청한 뒤 근로자들이 도착하는 데 3개월이나 걸렸다"며 "원래 초순계 온다고 했다가 말일로 바뀌어 손실이 컸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에 소요되는 기간이 올 1월 평균 58일에서 3월 67일, 5월 66일, 6월 77일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업체인 N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5명을 신청했지만 지난달에야 도착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20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12명이 일하고 있다"며 "신청부터 근로자가 도착할 때까지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국내 외국 인력 규모는 총 35만5000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19만7000명으로 55.5%에 이르고 있다. 강화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8만7000명에서 1만 명가량 더 늘었다.

2003년 합법화 조치로 임시 연장됐던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종합적인 외국 인력 정책 필**

요 = 노동연구원 유길상 부원장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문기술 외국 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숙련 외국 인력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기술 외국 인력 유치와 외국 국적 동포의 우선 활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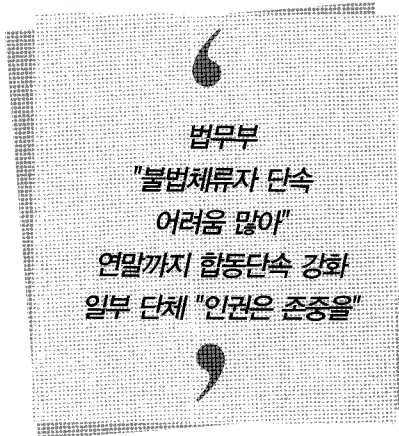
또 송출국 정부가 외국 인력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한국어 검정 시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도입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웅 목사는 "한국어 검정시험을 위해 한국어학교에 등록하는 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40만원 정도가 든다"며 "2주 배워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러운데다 월수입 7만~8만원 정도인 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송출국 정부가 외국 인력 선발과 송출 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도 있다.

송출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송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해당국과 양해각서(MOU)를 갱신할 때 도입 인력 규모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 **인권 측면에서는 긍정적 =**

노동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향상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8.7%는 '보통이다'고 대답, 고용허가제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응답 업체의 60.7%가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 체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긴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줄려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우려했던 비용 측면에서도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을 비교했을

때 응답자의 56%가, 불법체류자와 비교했을 때는 50%가 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대답했다. 오히려 고용허가제의 비용이 적게 든다고 응답한 비율도 산업연수생과 비교했을 때 8.3%, 불법취업자 대비 19.4%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다가 우리 직원들의 다리, 손가락,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최만교 조사과장은 "지난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친 사고가 16건이나 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과장은 "불법체류자들이 도망가면서 싸움은 기본이고 재래식 화장실에 빠지거나 심장발작 시늉을 하는 등 단속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털어놨다.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자 법무부와 검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단속 실적은 2만7400명, 올 초 월 3000명대에서 3월부터는 4000명대를 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003년 체류기한을 임시 연장해 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나가지 않는 바람에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자진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만9700명으로 대상자의 5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8월 말로 끝낼 예정이던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올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충돌이 벌어지면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있지만 단속 담당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조사1과 이승현 서기보는 "불법체류자들은 도망갔다 잡혀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에 무조건 죽기 살기로 도망친다"며 "순순히 단속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장 사정상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애기다.

반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무부를 비난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단속반들은 신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부터 채우고 싸늘이 단속을 한다"며 "이것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단속반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연행하면서 합법체류자까지 잡아 가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올 때 쓴 송출비용을 아직 벌지 못해 불법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다.

6000달러(600여만원)를 들여 4년 전 한국에 온 방글라데시 출신의 티푸(31)는 "산재와 체불 등으로 아직 송출비로 진 빚도 갚지 못했다"며 "도망을 다니더라도 한 2년 정도 더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팔 출신의 라주(33)는 "단속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지난달에는 30만원밖에 못 벌었다"며 "비행기표 값만 벌면 바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1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 공급 더디고 복잡 "불법체류자 써야 할 판"

"우리 공장은 원래 직원이 25명인데 지금은 10명만 남아 있다. 일손이 부족해 사장인 나도 직접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처럼 일손이 태부족인 영세업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용허가제를 이용할 여유가 없다."

수도권에 있는 섬유업체 S사의 흥모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률이 50~60%밖에 안 된다"고 하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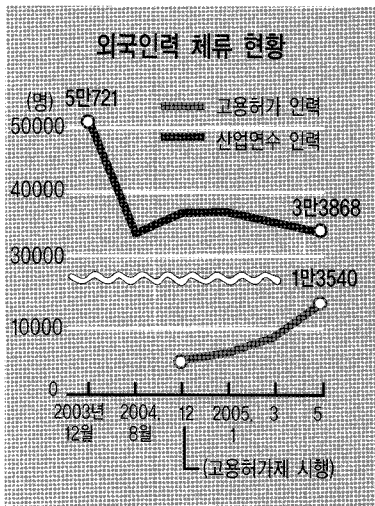
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 고용 신청을 포기한 그는 "영세사업장은 하루 빨리 인력 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업체의 수요량에 맞춰 산업연수생제든 고용허가제든 외국 인력을 신속하게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1년을 맞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자 감소와 외

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인력 도입 속도가 늦어 산업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2만 명으로 줄어든 산업연수생 쿼터가 지난달 소진됐고,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산업연수생들도 이달 중 기한이 끝남에 따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올해 불법체류자를 16만 명 정



도 출국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하반기엔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올 3월부터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3개월에서 3~7일로 단축하고,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1사 1제' 원칙을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1일 평균 고용허가서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올 7월 말까지 들어온 인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6개국의 1만4835명에 불과하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도입하기로 한 최소 목표 인원인 3만9000명에도 턱없이 못 미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원활하게 정착하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행정처리 지연 문제를 꼽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실무를 맡고 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근로자를 선발한 뒤 근로계약을 맺기 위해 현지 국가에 연락을 취하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행정처리와 통신, 교통 등 인프라에 문제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뒤늦게 현지 국가에 직원을 파견, 인력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고용허가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취업이 제한된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 특례제 근로자의 취업 범위를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법무

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올 초 평균 20일 정도였으나 절차 간소화 이후 도입 인력이 증가하면서 최근엔 40일로 길어졌다.

외국인 근로자를 3명 정도 더 고용할 계획인 D사의 신모 사장은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충당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3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업체가 체감하는 기간은 4개월 이상"이라며 "기다릴 여유가 없어 임금이 비싼 내국인 근로자를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급한 나머지 임시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가 단속에 걸려 고용허가제 적용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금속조립업체인 S사 한모 사장은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올 때까지 유예기간을 준다고 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 법무부 단속에 걸려 전과자가 되고 고용허가제 적용마저 취소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출혈을 감수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국인을 쓰고 있다"며 "업체에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이전 노동자와 새로운 노동자가 인수인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